



# 한·칠레 FTA 국회비준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FTA** 분노... 눈물... 절규로 가득찬  
여의도 국회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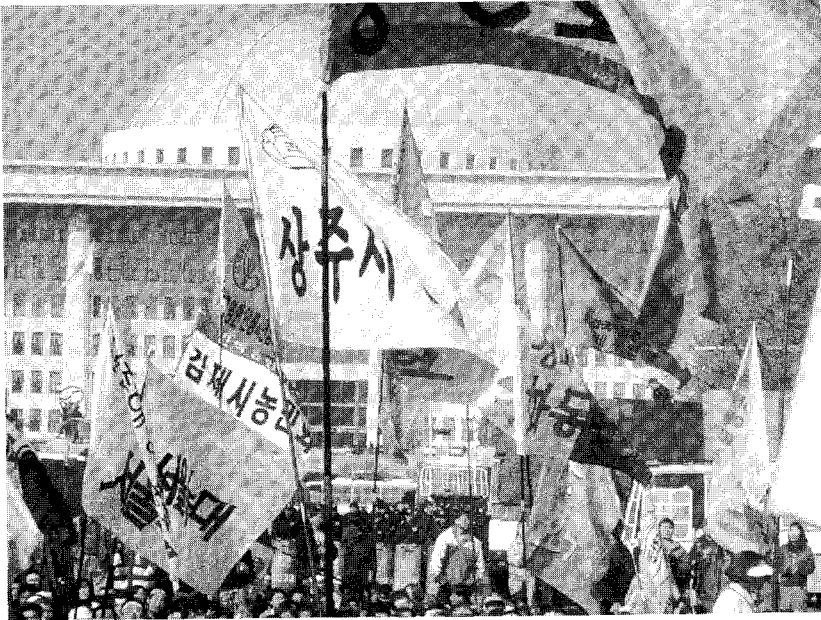
2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경찰의 물대포 세례에 맞서 눈물 흘리며 절규했던 농민들의 모습은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무차별적인 농업 개방의 물결에 휩쓸리며 낮은 농가소득과 극심한 농가부채로 시달리고 지쳐버린 주름진 농민들에게, 한-칠레 FTA 국회비준 소식은 '한국 농업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년 넘게 '저농산물 가격-저임금 정책'과 소수 재벌의 일방적인 이익 수호의 희생양이 되어 왔던 농민들은,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4월 총선에서 낙선시킬 것을 다짐했다. 벌써부터 농민단체들은 해당 국회의원의 명단을 정리·공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각 시민사회단체들도 늦게나마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 모니터 분석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한-칠레 FTA 비준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 특히 보

수언론의 일방적인 '농민 죽이기' 여론 조작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진작부터 이만큼의 사회적인 관심과 공론화가 가능했다면,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피하고 농민생존권 및 농업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FTA 협상 및 대책을 모색할 수 있었을런지 모른다.

**FTA** 세계 자본주의 개편 과정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한-칠레 FTA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진행중인 한-싱가포르·한-일 FTA에 대해서까지 협상 동향이나 협정 체결시 파급효과에 대한 공론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 경제와 일반 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1998년 한-칠레 FTA 협상 개시 이후 7년을 이어왔던 농민들의 FTA 반대 투쟁



◀지난 2월 16일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3천여명의 농민형제들이 국회앞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비준은 결국 오후 4시경 가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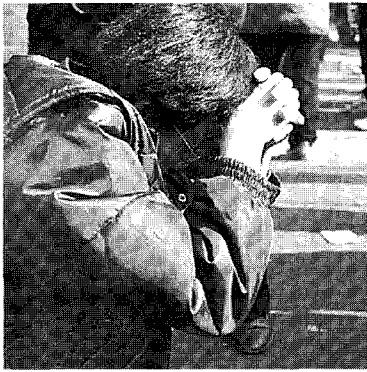
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계·보수언론의 일방적인 'FTA 대세론 및 불가피론'만 난무했을 뿐, 정작 FTA에 관련된 본질적인 검토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FTA의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최근 세계 경제 동향 및 한국 자본주의의 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또는 지역간 특혜무역협정을 뜻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FTA는 EU(유럽연합)나 ASEAN(아세안경제협력체)과 같은 동일 지역 내 유사한 정치·경제·사회구조를 지닌 국가들의 경제연합체 형태를 의미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계기로, FTA는 양국간 관세·비관세장벽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같은 FTA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자국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과의 FTA를 확대하여 EU·일본·중국(화교 자본) 등 거대 경제권을 견제하고, DDA 협상에서 자국의 이해를 극대화시키고 주도권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FTA 추진에 대항하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중남미자유무역지대(MERCUSOR)를 강화하고 인도·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개발도상국간의 FTA를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라질은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미국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 폐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DDA 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

이같은 전세계적인 FTA 확대 추세는 장기화되는 경제 불황과 다자간 협상체제인 WTO의 DDA 협상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다국적 자본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별



국가와의 FTA 틀을 확대하여 거대 다국적자본들은 자신의 이윤 추구 조건을 개선하려 한다. 즉 FTA의 추진을 통

해 △노동자 고용·해고의 자유화 △농업 구조조정 촉진 △복지정책 약화 등 무역장벽 및 규제 완화를 수반하는데, 이같은 노동자·농민·소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권 축소를 대가로 자본은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속에서 지닌 한국의 재벌들은 중국 등 선발 개도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심각한 대외경쟁력 하락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하여 재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FTA를 통해 국내외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속에서 '대외시장 확대' '국가 신인도 제고'를 명분으로 '자본의 이익=국익 증진'을 내세우며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들까지도 칠레 농수산물 수입 급증과 무역적자 확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지만 재벌들은 정부와 보수언론 등을 총동원하여 '한-칠레 FTA 불가피론'을 적극 유포하며 농민들의 반대 의견을 '토끼몰이식'으로 매도해 왔다. 하지만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 절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는 일본과의 FTA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관세 및 규제철폐 예외의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FTA 확대 추진에 있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재벌들의 이윤배반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FTA** 국민경제에 대한 실익이 없이 한국 농업에 재벌적 타격만 입하게 돼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서 보수언론과 재벌, 정부 내 경제·외교부처들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경제 실익 증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우선 농업 부문 특히 국산 과실·과채류의 심각한 타격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막강한 가격·품질경쟁력을 지닌 칠레 과실류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대 칠레 무역적자 확대와 농민들의 판로 및 소득 손실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물론 사과·배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10년간 계절관세 제도를 시행한 뒤 관세가 철폐되는 포도 및 복숭아·자두·키위 등은 수입 물량이 점차 확대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낮은 국내 과실·과채류를 대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한-칠레 FTA 발효 후 10년간 5,86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산 봄철 과실·과채류의 본격 출하기에 유입될 칠레산 중저가 과실류의 파괴력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칠레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 시장에서 값싼 칠레산 레몬이 미국산 레몬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재계, 보수언론이 그토록 주장했던 '대 칠레 공산품 수출시장 확대'나 '중남

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는 가능할 것인가? 1인당 GDP가 5천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칠레 시장을 겨냥한 공산품 수출 증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불안한 중남미 정치·경제적 상황과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낮은 구매력 등도 누차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한편 2월 16일 FTA 비준 직전,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FTA 비준 지연으로 대 칠레 공산품 수출 점유율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FTA를 맺은 경쟁국보다 6%의 관세를 더 물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왔다. 하지만 이는, 아르헨티나·브라질 통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로 인해 이들 국가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급상승한 데 있다.

결국 정부와 재벌·보수언론은 'FTA 비준 지연=가격경쟁력 하락'이라는 신화를 창출해 내면서까지 국민 여론을 오도하여 FTA 국회비준을 밀어붙인 것이다.

**FTA** '시장자유형 농민자생력 증진 정책'인가, '시장방임형 농민죽이기 정책'인가?

국민경제 전반에 가시적인 실익이 없는데도 농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어 온 한-칠레 FTA는, 그 피해 여부에 대한 논의를 떠나 '강자 주도의 불공정한 국제 농산물시장의 횡포'에 우리 농업을 무장해제시켜 말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FTA이행특별법' 및 'FTA농업지원대책'의 기초는, 경쟁력이 취약한 과실·과



채류 종사 농민을 대상으로 한 규모화 및 폐원 등 구조조정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정부가 과실·과채류의 산지 유통활성화 사업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의한 과잉 공급 및 가격폭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급전망에 기초한 생산·수급조절은 필수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농민들의 시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농업 보호 및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결여된 정부 농정 기조에 대해 농민들의 불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즉, 급변하는 시장 여건에 적응하여 수입 농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업 보호정책을 옹도 폐기시키면서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을 무책임하게 시장의 횡포에 내맡기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에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강한 농업으로 키우겠다



는 정부의 '선무당 사람잡기' 식의 농정이 빚어낸 결과는 매년 100여명이 넘는 농민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극심한 농가부채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중량 기준 30% 선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낮은 곡물자급율은 카길 등 거대 곡물메이저가 지배하는 국내 식용·사료용 잡곡 시장의 냉엄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FTA**      **식량안보 확보 · 농민생존권**  
**수출을 위한 소득보전 ·**  
**농업 보호가 농정의 기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의 국가들은 막대한 국내 보조금 및 수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왔으며 각종 곡물 및 과실·채소·축산 부문에서 탄탄한 자급 기조를 유지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식량자급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일본은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의 중장기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국가들이 식량안보 확보 및 농민 생존권 수호라는 농업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 국가들이 농업보조금 삭감 등을 통한 농정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민들의 소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직접 지불제도를 강화하고 자국 농

업에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농업 개방 일정은 최대한 미루는 등 농민생존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농정의 기본은 식량안보 확보와 농촌 경제·사회·환경·전통문화의 유지·발전과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강력한 수단은 적정 농가소득 확보와 무분별한 대외 시장개방 지양 등 농업 보호 정책을 통한 농민생존권 수호에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농민들의 피땀으로 생산한 고품질의 농축산물

을 제값에 평가받고 판매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장지향형 농업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협동조합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추곡수매제도 폐지·무분별한 농업 개방 등

과 같이 농민들을 시장에 내팽개치는 이번 한-칠레 FTA 국회비준과 같은 '시장방임형 농업 정책'은, 400만 농민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전형적인 '농업·농민포기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민동연**

## FTA비준안 찬반명단

▲찬성(162명)=△한나라당(98명) 강성구, 강신성 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흥길,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영선, 김용균, 김용환, 김원길,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진재, 김찬우,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민봉기, 박근혜, 박상규, 박세환, 박원홍, 박종근, 박종웅, 박종희, 박진, 박창달, 서병수, 서상섭, 서정원, 손희정, 송병대, 신영균, 신현태, 심재철, 안상수, 안택수,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희룡,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이강두, 이경재, 이근진, 이상득,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원창, 이원형, 이운성, 이재선, 이재창, 이주영, 이한구, 이해봉,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전용원, 전재희, 정갑윤, 정문화, 정의화, 정형근, 조용규, 조정부, 최병국, 최병렬, 한승수, 함석재, 홍문종,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민주당(23명) 김경재, 김기재, 김방림, 김성순, 김영환, 박급자, 박병윤, 박상희, 설훈, 안동선, 안상현, 유용태, 이만섭, 장재식, 장태완, 정범구, 조성준, 조순형, 조재환, 최명현, 최선영, 한충수, 함승희. △열린우리당(36명) 김근태, 김덕규, 김덕배, 김명섭, 김부겸, 김성호, 김영

춘, 김원기, 김원웅, 김태홍, 김희선, 남궁석, 박병석, 배기선, 설송웅,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안영근, 유시민, 유재건, 이부영, 이우재, 이종걸, 이창복, 이해찬, 이호웅, 이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천용택, 천정배, 최용규, 홍재형 △기타(5명) 강숙자, 박관용, 안대륜, 정몽준, 조희욱.

▲반대(71명)=△한나라당(31명) 권기술, 권오을, 김락기, 김성조, 김용갑, 김용학,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송광호, 신영국, 심규철, 양정규, 윤한도, 이규택,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이양희, 이완구, 이인기, 이재오, 이해구, 임인배, 전용학, 정병국, 정창화, 주진우, 최연희, 하순봉, 현경대. △민주당(29명) 고진부, 김경천, 김상현, 김옥두, 김충조, 김태식, 김효석, 박상천, 박인상, 박종완, 박종우, 배기운, 송훈석, 심재권, 양승부, 유재규, 윤철상, 이낙연, 이용삼, 이정일, 이협, 이희규, 장성원, 전갑길, 정균환, 정철기, 최재승, 추미애, 한화갑. △열린우리당(3명) 문석호, 송석찬, 이강래 △기타(8명) 김종호, 김학원, 백승홍, 오장섭, 이인제, 정우택, 정진석, 조부영.

▲기권(1명)=강운태.